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6. 4. 20.
No. 1059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명수
www.krihs.re.kr

이 브리프는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든 생분해성 펄프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양은모 부연구위원
이병재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이소영 전문연구원
박혜정 전문연구원
조정우 연구원
정윤희 연구위원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

주요 내용

- ① 분쟁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전통적인 ‘단기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이하 HDP Nexus)’에 기반한 통합적 재건과 회복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재정적·운영적 제약이 누적되어 구호-재건-개발 간 단절이 반복
 - 이러한 맥락에서 국토·도시 부문은 토지·자원 배분, 사회기반시설 재구축, 지역경제 회복 등 공간적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재건 과정의 핵심 매개로 기능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통합 촉진, 고용 창출, 도시회복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수단으로서 중요성 확대
- ② 한국의 경우 최근 10년(2014~2023년) 기준 전체 공적개발원조 대비 국토·도시 부문 지원 비중이 33%로 나타나 주요 공여국과 유사한 수준의 구조적 집중을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운송·저장 42.3%, 상수도·위생 27% 등 인프라 중심의 지원 구조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
 - 한국의 분쟁 취약국 대상 개발협력은 전후 복구 경험과 정책적 전문성 축적을 기반으로,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국토·도시 재건과 제도적 안정화를 목표로 발전
 -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현재의 분쟁 취약국에 ① ‘전쟁 후 재건에서 경제발전으로의 전환’이라는 구체적 발전 경로를 제시하고, ② 인도적 지원 → 개발 → 평화로 이어지는 HDP Nexus의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③ 포용적 국토·도시 재건을 위한 전략 사례로서의 의의를 제고

정책방안

- ①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은 5대 협력 유형(① 생명선 구축 사업, ② 국토·도시 계획 사업, ③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사업, ④ 기후변화와 도시회복력 사업, ⑤ 거버넌스 강화 사업)으로 체계화 필요
- ② 향후에는 HDP Nexus 접근을 넘어, 새로운 도시의제(NUA)-국가도시정책프로그램(NUPP)-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단기 긴급구호가 중장기 국토발전과 경제 회복으로 연계되도록 공간통합과 회복력을 핵심 원리로 하는 한국형 개발협력전략 정립 필요

01. 분쟁 취약국 대상 개발협력 관련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한계

분쟁 취약국의 개념 정의와 범위

(정의) 분쟁 취약국은 '물리적 전쟁뿐 아니라 거버넌스 부재, 경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인해 구조적 취약성이 발생하거나 심화된 국가'를 의미

- 국제사회에서는 분쟁 취약국의 정의가 단순한 물리적 충돌에 한정되지 않고, 거버넌스·경제·사회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
-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는 무력 충돌 여부를 넘어 제도적·사회적 취약성과 복합적 위험 요인을 기준으로 분쟁 취약국을 정의하고 있으며, 무력 충돌 종료 이후에도 갈등의 여파와 제도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취약국으로 간주
- 한국은 분쟁 취약국을 '제도 미비·분쟁·재난·빈곤 등으로 국가의 기본적 기능 수행이 곤란하거나 국민의 안전보장 및 인권보호가 어려운 국가'로 정의하며, '국가의 복원력이 약해 취약성이 만성화되어 개발을 저해하고, 취약성·빈곤·위기가 상호작용하며 발전에 구조적 제약을 초래하는 국가'로 규정(기획재정부, 외교부 2017, 2)

(범위) 분쟁 취약국은 물리적 충돌이 진행 중인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분쟁 종료 이후에도 제도적·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국가를 포함하며, 최근에는 기후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요인이 결합된 복합위기 상황까지 반영하는 개념으로 확장

- 세계은행의 분쟁 취약국 목록에는 무력 충돌이 진행 중인 국가뿐만 아니라, 내전 및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제도적 회복력이 취약한 국가가 포괄적으로 포함(World Bank)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분쟁 취약국의 취약성이 기후위기, 경제위기, 제도 붕괴 등이 상호 결합된 '복합위기'의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

분쟁 취약국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과 핵심 원칙

(패러다임의 변화) 국제사회의 분쟁 취약국 지원은 단기 인도적 구호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HDP Nexus를 기반으로 사회통합, 경제 회복, 평화 구축을 포괄하는 통합적 재건 방식으로 전환

- 전통적인 분쟁 취약국 지원은 현지의 맥락과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접근, 현지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한 및 배제, 그리고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존재(Paris 2010)
-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취약국 지원을 단기적 구호 중심에서 벗어나 포괄적 재건과 회복력 강화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패러다임 역시 전통적·인도적 지원에서 HDP Nexus 기반의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
- 전후 복구 및 재건협력에 관한 논의 또한 물리적 인프라 복구를 넘어 사회통합, 경제 회복, 평화 구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

(분쟁 취약국 지원의 핵심) 최근 재건 패러다임은 '더 나은 재건'과 회복력 중심의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포용성과 공간통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

- 새로운 재건 패러다임은 회복력(resilience) 중심 접근과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원칙을 기반으로, 단순한 복구를 넘어 향후 미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역량 강화를 지향
- 피해 분석과 공간정보 기반 시각화를 활용하여 재건계획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는 공간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
- 또한, 다양한 사회집단과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공간적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성·아동·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성인지적 접근이 핵심 지원 요소로 부각

분쟁 취약국 지원의 한계와 개선 방향

(분쟁 취약국 지원 저해 요소 및 대응 방향) 분쟁 취약국 지원의 효과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HDP Nexus 접근을 기반으로 하되, 국토·도시 부문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접근과 범정부·민간 협력에 기반한 통합 지원체계 및 자원 혁신 필요

- 분쟁 취약국 재건 과정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부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정의 복잡성,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 등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HDP Nexus 접근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토·도시 부문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간 기반 접근(spatially-informed approach)이 필요
-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다차원적 취약성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 수립,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 강화 필요

02. 한국의 분쟁 취약국 지원정책 특징

한국의 분쟁 취약국 국토·도시 부문 지원 특징

(특징 및 강점) 한국은 전후 복구 경험과 개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 취약국 재건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국토·도시 인프라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구조적 강점을 보유

- 한국의 분쟁 취약국 재건협력은 전후 복구 경험과 개발정책 전문성을 기반으로,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국토·도시 재건과 제도적 안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예: 한국국제협력단의 다자성 양자 사업 확대·개편 → ‘프로그램형 사업’ 체제 도입)
- 한국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분쟁, 재난, 제도 미비, 빈곤 등으로 국가 기능 수행이 어려운 국가를 취약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OECD의 분류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국을 선정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최근 10년(2014~2023년) 기준 OECD DAC 공여국 가운데 11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재건 및 국토·도시 부문 원조 규모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스위스에 이어 6위 수준임. 전체 ODA 대비 국토·도시 부문 비중 역시 6위를 기록하여, 절대적 원조 규모 대비 국토·도시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은 것을 확인(OECD Data)
- 세부적으로 한국의 국토·도시 부문 원조는 운송 및 저장(42.3%), 상수도 및 위생(27%), 긴급 대응(15.8%)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인프라 구축 중심 지원 구조를 반영
- 또한, 다수 공여국에서 건설 분야 지원 비중이 0%에 근접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건설 분야 지원 비중(0.8%)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후 복구 및 신속한 인프라 확충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구조적 강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한국의 분쟁 취약국 지원 한계와 향후 정책 방향

(구조적 한계) 한국의 분쟁 취약국 지원은 제도적·재정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DP Nexus 기반의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구호-재건-개발 간 연계 부족과 성과관리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

- 한국의 분쟁 취약국 지원은 제도적 기반의 정비, 재정 규모의 확대, 사업 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
- HDP Nexus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과 프로그램형 장기 지원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긴급구호-재건-개발 간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데이터 축적과 정책 환류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

(향후 정책 방향) 향후 분쟁 취약국 지원은 프로그램 기반의 중장기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한국의 재건 경험을 현지 맥락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공간통합 및 회복력 중심의 통합 협력모델 구축 필요

-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인프라 등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고려한 전략적 포지셔닝이 요구되며, 수원국의 장기 국가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국토·도시 재건 로드맵 수립 필요
-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기반의 중장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전후 재건 경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분쟁 취약국의 지역적·제도적 맥락에 맞게 적용 필요
- 또한, 공간통합적 접근과 회복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장기적·통합적 협력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원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제고 필요

03. 분쟁 취약국 지원전략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

주요 공여국의 분쟁 취약국 지원전략과 특징

(주요 특징) 미국·영국·일본·독일·스위스 등 주요 공여국은 분쟁 취약국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평화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HDP Nexus에 기반한 통합적 복구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기전략을 강화

표 1 국가별 분쟁 취약국 개발협력 종합지원전략체계

국가	정책	이행체계
미국	(지원근거) • 1961년 대외원조법(FAA) • 글로벌취약성법(GFA) • 제105장 글로벌 취약성 (지원전략) • 분쟁 예방 및 안정 증진 전략	(핵심기관) • 미국국제개발처(USAID), 국무부, 국방부 (재원) • 분쟁 예방 및 안정화자금 • 복합 위기 대응 자금 (지원방식) • 외교·원조·안보 협력과 무역·투자, 제재, 지식·전략 소통 등 종합적 수단 활용 (성과관리 기준) • USAID 취약성 프레임워크
영국	(지원근거) • 2022 국제개발법 • 2006 국제개발(보고 및 투명성)법 • 2015 국제개발(공적개발 지원목표)법 (지원전략) • 영국 국제개발전략(2022)	(핵심기관) • 외교·영연방·개발부(FDCO), 독립원조영향위원회(ICAI) (재원) • 영국 통합안보기금(UKISF) (지원방식) • 중저소득국 투자와 함께 전문가 지원, 무역·제도 구축, 이니셔티브 추진, 디지털 기술 제공 (성과관리 기준) • 국별 수준의 취약성 평가 지표
일본	(지원근거) • 개발협력헌장(2015) (지원전략) • 국가안보전략(NSS)	(핵심기관) • 일본 외무성(MOFA of Japan),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재원) • 내각이 승인한 정부부처 예산 (지원방식) • 유상원조(차관)가 ODA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무상원조는 프로젝트·분야·국제기구·예산·장학 중심으로 지원 (성과관리 기준) • PDCA Cycle
독일	(지원근거) • 별도 법적 근거 없음 • 국제 규범 및 국가 정책,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 이행 (지원전략) • BMZ 2030 개혁전략	(핵심기관) • 경제협력개발부(BMZ), 독일국제협력유한책임회사(GLZ), 재건신용기관(KfW) 개발은행 (재원) • 내각이 승인한 연방정부 예산 (지원방식) • 정치·안보·법치·경제 등 핵심 분야 지원과 함께 대화·평화 구축, 민주주의·인권·성평등 증진, 식량안보 및 민간부문 개발 지원 (성과관리 기준) • OECD DAC 평가 기준에 맞춰 사업에 따라 유연한 성과 평가 지표 수립
스위스	(지원근거) • 연방 헌법 •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연방법 • 민간 평화 증진 및 인권 보호 조치에 관한 연방법 (지원전략) • 국제협력전략 2025~2028, 평화 및 국가건설전략	(핵심기관) • 스위스개발협력청(SDC), 경제협력개발국(SECO), 평화·인권부(PHRD) (재원) • 의회에서 4년을 주기로 승인하는 국제협력 약정 예산 (지원방식) • CSPM 기반으로 맥락·시나리오 분석, 성과 중심 관리, 위기 대응, 협력·보호 확대, 클러스터·심리 사회적 접근 및 인력·안보 관리 추진 (성과관리 기준) • SMART 지표 • 집계기준지표(ARIs) • 주제기준지표(TRIs)

- 주요 공여국은 분쟁 취약국 지원을 단순한 인도적 구호나 재건을 넘어 분쟁 재발 방지와 제도적 회복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HDP Nexus 기반의 통합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차원적 취약성 분석을 근거로 한 국가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강조
- 또한 주요 공여국은 분쟁 취약국을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급 대응 이후 제도·경제·국토 공간의 복합적 회복을 목표로 지원을 추진하며, 특히 주거·교통·토지관리 등을 포괄하는 국토·도시 통합 복구 사업을 중시하고, 부문 간 연계성과 현지 주도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순환적 접근으로 전환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 취약국 지원전략과 특징

(주요 특징) 주요 국제기구는 분쟁 취약국 지원에 있어 HDP Nexus를 기반으로 통합적·맞춤형·협력적 접근을 통해 단기 대응에서 장기적 안정화까지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제도적 지원을 지향

- 주요 국제기구는 분쟁 취약국 지원에서 단기 인도적 구호에 한정하지 않고 재건·개발·평화를 연계하는 HDP Nexus 기반의 통합적 접근을 공통적으로 지향
- 또한 다차원적 취약성 분석과 데이터 기반 진단을 바탕으로 국가별 맥락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 수립과 정책 설계를 강조
- 아울러 인프라 복구를 넘어 제도 및 거버넌스 강화, 포용성 제고, 갈등 민감성 확보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회복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다자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자원, 정책, 집행 역량을 결합하는 협력적 운영 구조를 활용
- 마지막으로 단기 대응에서 장기적 안정화에 이르는 단계적·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건을 추구

표 2 국제기구별 분쟁 취약국 개발협력 종합지원전략체계

국제기구	구분	특징
OECD	특징 및 지원전략	• 직접 사업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취약성의 정의·분류·측정 체계를 제시하고 공여 원칙과 국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규범 주도형 기관의 성격을 가짐
	성과관리	• 국제사회의 공통 진단 기준과 정책 담론 형성에 기여하며 DAC-CRS 통계를 통해 취약국 지원의 규모와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함
World Bank	특징 및 지원전략	• FCV 전략을 통해 예방·대응·회복의 전 주기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긴급추가용자와 사업 재설계 등 유연한 재정 운용을 병행함. 아울러 단기 인프라 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정관리, 제도, 거버넌스 강화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재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성과관리	• 회복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 체계(PDNA)와 독립평가그룹(IEG) 등 제도화된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피해 손실·복구 수요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산정하고 국가·포트폴리오·프로젝트 단위의 다층적 평가를 수행
	사례 시사점	• 단기 복구와 장기 재건을 분절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원·제도·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계한 통합적 지원 구조를 통해 회복과 재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이 강점임
UNESCO	특징 및 지원전략	• 문화유산을 도시 회복의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시 재건 및 회복을 위한 문화 프레임워크(CURE)를 통해 문화 기반의 사람 중심·공간 중심 재건 접근을 제시
	성과관리	• 도시 재건과 함께 문화자산 복원, 공동체 통합, 제도적 지속가능성, 재정 운용 효율성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사례 시사점	• 재건 사업은 인프라 공급 중심 접근을 넘어, 문화와 공동체를 회복의 핵심 요소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UN-Habitat	특징 및 지원전략	• UN-Habitat는 도시회복 프레임워크(URF)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과 거버넌스를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접근함. 다층 거버넌스와 제도 정비, HDP Nexus 전략 반영, 도시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회복전략을 수립함
	성과관리	• 도시 기능 회복과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이를 지역·도시·국가 단위에서 모니터링. 특히 주택, 토지, 재산(HLP) 관련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수행
	사례 시사점	• 다분야를 포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 재건을 지원하고, 공간 기반의 통합적 지원전략을 마련

한국의 분쟁 취약국 지원전략 수립 방향

(한국의 지원전략 수립 방향) 한국이 전후 복구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재건협력 촉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HDP Nexus에 기반한 중장기적 통합형 지원 모델 구축 필요

- 한국의 전후 복구 경험은 현재의 분쟁 취약국에 대해 ① '전쟁 후 재건에서 경제발전으로의 전환'이라는 구체적인 발전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② 인도적 지원 → 개발 → 평화로 이어지는 HDP Nexus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는 경험적 근거로 기능, ③ 포용적 국토·도시 재건을 위한 전략적 사례로서 공간 기반 개발과 제도 구축을 결합한 통합적 재건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
- 향후 공간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긴급 대응 이후 재건 및 개발로 연계되는 단계적·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쟁 취약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필요

04. 국토·도시 부문 분쟁 취약국 지원전략 방향 제언

한국의 분쟁 취약국 지원 과제

(지원계획) 한국은 전후 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통합적 전략과 선택적 협력을 결합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분쟁 취약국 지원전략 수립 필요

- 한국은 전후 재건 경험을 기반으로 분쟁 취약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재건의 방향성과 정책적 경로 제시 필요
- 단기적 복구를 넘어 경제·제도·인적 역량을 포괄하는 장기적·통합적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필요
- 또한, 전략적 협력 대상국 및 중점 분야를 선별하고, 국내외 정책적 정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통해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지원실행) 분쟁 취약국 지원의 실행 단계에서는 현지 협력체계와 HDP Nexus에 기반한 통합적 거버넌스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

- 분쟁 취약국의 복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 기반의 소통 채널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포함하는 국토·도시 개발협력 특화체계 구축 필요
- 아울러 HDP Nexus 기반의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와 진단·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원조 효율성 강화 필요

(사후관리) 분쟁 취약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건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마련 필요

- 분쟁 취약국의 불안정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간 연계성 강화 필요
- 또한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재건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통합적 사후관리체계 구축 필요

한국형 분쟁 취약국 지원종합전략

(한국의 분쟁 취약국 전략 제언) 한국은 HDP Nexus에 기반한 공간통합 및 회복력 중심의 재건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단기 대응에서 중장기 발전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한국의 분쟁 취약국 지원종합전략은 HDP Nexus를 기반으로 공간통합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재건 모델의 적용을 핵심으로 제안

- 해당 모델은 사회기반시설 복원, 국토·도시 계획 수립, 거버넌스 및 관리 역량 강화, 기후적응형 재건, 민관협력 기반 자원 마련 및 기술협력 등 주요 분야를 포괄
- 또한, 전략의 부재, 정보 공유의 한계, 성과 평가 체계의 미흡 등 기존의 제약을 보완할 경우, 제안된 전략을 통해 단기 대응부터 중장기 회복으로 연계되는 성과 창출과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그림 1 한국의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분쟁 취약국 지원종합전략(안)



한국의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5대 협력 사업 유형

(협력 사업 유형 제안) 한국은 전후 재건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제도적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단기적 복구부터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분쟁 취약국 대상 5대 국토·도시 부문 협력 분야와 세부 협력 내용 구체화 필요

- (생명선 구축 사업) 물·에너지·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선(lifeline) 구축 사업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영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핵심 협력 분야
- (국토·도시 계획 사업) 국토·도시 계획 사업은 파괴된 공간구조의 복원과 장기적 발전 경로 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계 기반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지원은 재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
- (기후변화와 도시회복력 사업)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대비를 포함한 회복력 강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분야로 부상
- (거버넌스 강화 사업) 제도 정비와 행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개선은 재건 과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
- 이러한 협력 사업 유형을 기반으로, 한국의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은 물리적 재건을 넘어 경제·사회·제도적 회복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체계화 필요

표 3 한국의 분쟁 취약국 국토·도시 부문 중점 협력 사업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적용 예시	SDGs
① 생명선 구축 사업	• (핵심 내용) 전쟁(혹은 재난) 이후 도로, 주택, 상수도, 전력 등 인간의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 물리적 인프라 복원 중심의 지원 • (한국의 강점) 1950~1960년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단기간에 자립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통합계획을 수립·관리한 경험 보유 • (의의) 도시기반시설 복구와 산업 인프라 연계형 지원 추진 → 경제 회복형 지원 수행 • (특징) 신속성 중요 / 개별 토목사업 가능, 국토·도시 계획과 병행 필요	• (사업 예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력, 병원 등 물리적 인프라 복구·건설 • (국가 예시) 우크라이나, 미얀마, 에티오피아, 이라크	• (SDGs) 6, 7, 9
② 국토·도시 계획 사업	• (핵심 내용) 단순 건설이 아닌, 공간적 통합을 통해 사회통합, 거버넌스 강화, 일자리 재생을 아우르는 재건 지원 • (한국의 강점)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시마스터플랜 수립 경험을 통해 다층적 공간계획과 균형발전, 지역 회복력 모델 축적 • (의의) 분쟁 후 지역 간 격차 해소, 난민과 이주민 장기 정착지 개발, 지역경제 기반 마련 등 → 도시공간 재건에 직접적 기여 → 공간을 통한 평화 구축 실현 • (특징) 종합성 중요 / 장기 비전 제시와 총체적 협력 유도	• (사업 예시) 국토·도시 계획, 토지 행정, 제도 개혁 • (국가 예시) 모잠비크,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 (SDGs) 3, 4, 5, 11, 12, 13, 14, 15
③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사업	• (핵심 내용) 단기적으로는 분쟁 이후 붕괴된 행정체제와 정책 시스템 복원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개인의 역량 향상을 지원 • (한국의 강점) 붕괴된 행정체제와 정책 시스템을 복원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계획 운영체제를 구축한 역량 보유 • (의의) 도시관리, 토지행정 등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행정·정책 시스템 구축 지원 →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 • (특징) 타당성 중요 /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 활성화(재활성화)	• (사업 예시) 공무원 연수, 기술 훈련, 행정 역량 강화 교육 • (국가 예시) 미얀마,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라크	• (SDGs) 1, 2, 3, 8, 9
④ 기후변화와 도시회복력 사업	• (핵심 내용) 단기 복구를 넘어 다양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복원력 강화 • (한국의 강점) 전후 단기 복구를 넘어서 기후, 재난, 사회적 위기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복원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스마트시티, 재해대응, 포용적 도시 등)을 보유 • (의의) 회복력, 포용성 중심의 지속가능도시(SDG11) 달성에 기여 • (특징) 지속가능성 중요 / 탄소저감, 이상기후(홍수, 가뭄, 폭우, 해수면 상승) 대비	• (사업 예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 (국가 예시) 동티모르	• (SDGs) 12, 13, 14, 15
⑤ 거버넌스 강화 사업	• (핵심 내용) 선진기술 기반 재건협력 • (한국의 강점) 재건협력에 활용 가능한 ICT, 스마트도시, 에너지, 건설 분야 선진기술 보유 • (의의) 한국기업 등 민간참여형 재건 모델 구축 및 국제협력 시장 진출 촉진 • (특징) 투명성 중요 / 제도 및 조직 구축, 전문인력 양성	• (사업 예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GIS, 스마트 교통관리, 재난정보관리 • (국가 예시) 이라크, 우크라이나	• (SDG) 16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외교부. 2017. 취약국 지원 전략.

OECD. Data. <https://data-explorer.oecd.org> (2025년 6월 16일 검색).

Paris, R. 2010. Saving liberal peacebuilding.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6, no.2: 337-365.

World Bank. Classification of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ituations. <https://www.worldbank.org/en/topic/fragilityconflictviolence/brief/classification-of-fragile-and-conflict-affected-situations> (2025년 11월 17일 검색).

- 양은모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emyang@krihs.re.kr, 044-960-0417)
- 이병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leeby@krihs.re.kr, 044-960-0211)
- 유희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044-960-0553)
- 이소영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soylee@krihs.re.kr, 044-960-0316)
- 박해정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hjpark@krihs.re.kr, 044-960-0429)
- 조정우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구원(jwcho@krihs.re.kr, 044-960-0336)
- 정윤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yunijeong@krihs.re.kr, 044-960-0217)

※ 이 브리프는 “양은모, 이병재, 유희연, 이소영, 박해정, 조정우, 정윤희. 2025.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

